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벼 재해보험 전국 확대 시행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 확충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 정보

국내·외 증자산업 현황과 시사점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자재 이용관련 현장 애로사항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벼 재해보험 전국 확대 시행

※ 본 자료는 5월 2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올해 처음 전국사업으로 확대된 「벼 보험」, 5월 2일부터 판매 시작」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현황

○ 사업 지역: ('09~'10) 20 → ('11) 30개 시·군

광역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시군	평택 이천 화성	철원	진천 청원	당진 서산 논산 예산 아산	김제 익산 부안 정읍 고창	해남 나주 영암 경주 의성	상주 구미 경주 의성	김해 밀양	기장	울주	강화

주 1) 위 시범사업지역(378,195ha)은 전국 벼 재배면적(886,516ha)의 42.2%임.

2) 굵은 글씨는 '11년 신규지역임.

○ '10년 대비 보험료 127.1%, 농가수 108.0% 증가

<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결과 >

단위: 백만 원, ha, 호

구 분	2009년	2010년(a)	2011년(b)	증감(a-b)
가입금액	149,928	145,240	370,405	225,164
가입면적	187,757	17,829	45,917	28,088
보 험 료	3,533	3,738	8,489	4,751
농 가 수	9,995	9,464	19,683	10,219

벼 재해보험 개요

- (가입기간) '12. 5. 2 ~ 6. 22
- (보험사업자) 농협손해보험(주)(지역 및 품목농협 위탁판매)
- (가입대상) **4,000㎡ 이상을 가입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단, 1,000㎡ 미만인 농지는 가입 제외)
- (가입지역) 전국
- (가입품종 및 재배양식) **벼(발벼 2종 제외)**

- (보상하는 재해)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2종으로 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름.
 -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5% 수준을 지원**
 - * '11년 평균보험료는 10a당 18천 원이며, 농가부담은 4.6천 원 수준
- (보험금 종류)
 - 수확감소보험금: 이앙완료일¹⁾ 24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재이양보험금: 이앙완료일 24시부터 2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이양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지급
 -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 경작불능보험금: 이앙완료일 2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출수기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지급(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농지 계약은 소멸됨.)
 -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40%
- 벼 이외,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이며, 현 판매(4.2~4.27) 중인 밤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재배시기(과실은 보장재해)에 맞추어 판매될 예정
 - * 품목 판매예정: 고구마(5.1~5.31), 옥수수(5.1~6.15), 마늘(10.4~11.30), 매실(11.15~12.7)

1) 다만, 보험계약 시 이앙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적용

주요 농정 이슈_2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 확충

※ 본 자료는 5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풍족한 용수공급」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 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공급**해 주는 사업

→ (추진실적) 1960년대 식량증산 및 농업기반정비 근대화를 위해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농업용수개발 시행으로 전체 논 984천ha 중 10년빈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520천ha 조성(52.9%), 2010년부터 농업용수개발에서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로 전환

- 농촌용수개발 6개 지구는 5년 정도 기간 동안 총 800억 원의 사업비(지구당 100~180억 원 수준)를 지원할 계획
-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시설이 없거나 관정 등 임시방편적인 수리시설에 의존하는 **가뭄상습 농경지 900ha가 가뭄재해 없이 안전하게 영농 가능**
 - 연간 18만 톤의 하천유지용수를 꾸준히 공급하고 1,264가구 3,275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생태 환경 개선 및 생활용수 부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을 2,100억 원으로 증액편성('11년: 1,729억 원)하여 계속 공사 중인 65개 지구의 조기 완공을 위해 확대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 6개 지구 2,124ha를 준공할 계획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농업용수 수질기준(IV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에 인공습지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 (추진실적) 저수지 수질개선 시범사업('01~'03, 무안 감둔지) 결과를 토대로 '07년부터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53개 저수지에 대해 수질개선대책 추진, '11년까지 5개 지구 완료, '12년 14개 지구 시행 중

- 농업용수 수질기준(IV등급)을 초과하여 수질개선이 시급한 저수지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3년 정도 기간 동안 총 124억 원의 사업비(지구당 22~37억 원 수준)를 지원할 계획
-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의 수질이 IV등급으로 개선되어 **깨끗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및 생태계복원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년도는 수질개선 예산 13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인 10개 저수지의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 4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

<참고> **미국 광우병 발병 이후 세계 주요국 조치동향**(2012.5.1 기준)

-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7개국은 별도조치 미 채택
- **우리나라 등 4개국**은 **검역강화 등 조치 채택**
 - **우리나라**는 **검역강화, 정보요청 및 실사단 파견 조치를 시행**
 - 대만 및 칠레는 검역강화와 정보요청 조치를 채택하였으나, **대만**의 경우 검역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아직 미 시행**
 - **코스타리카**는 **검역위생규정 준수 표시 부착을 의무화**
-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은 부분적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
 - **이집트 및 파테말라**는 **캘리포니아산 쇠고기 수입만 금지**
 - **인도네시아**는 **육골분, 내장 및 젤라틴 수입을 금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5.1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 본 자료는 5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4월 소비자물가 평가**

- **'12.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전월대비 0.0%)하여 **지난달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
 - 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4.19일) ·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으로 점차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는 모습
 -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지난달 보다 둔화**(3월 2.1% → 4월 1.0%)되고,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
 -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정책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물가안정노력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전년 동월대비 2.6% → 2.5%)
-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2.0%(전월대비 △0.1%)로 **안정세**
 - 생활물가(전년 동월대비, %): (11.12) 4.4 (12.1) 3.3 (2) 3.1 (3) 2.0 (4) 2.0
-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농산물,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도 1.8%(전월대비 0.1%) 상승
 - 근원물가(전년 동월대비, %): (11.12) 3.6 (12.1) 3.2 (2) 2.5 (3) 1.9 (4) 1.8

□ **양우 전망 및 대책**

- 향후 물가여건은 전반적으로 안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 가공식품 인상압력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
 -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중동정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 국내휘발유 가격은 4.18일 최고치(2,063원/ℓ)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 (4.30일 2,059원/ℓ)

- 그동안 인상이 자제되었던 **일부 공공요금 · 가공식품 등의 인상 움직임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물가 불안요인 해소와 선제적 물가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정착하고 선진 물가안정 시스템 기반 구축
- (**기름값 안정**) 기 발표된 “식유제품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방안”(4.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적점검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 특히, 알뜰주유소 조기정착, 서울시내에 소규모 주유소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유가격 안정노력에 집중
- (**농산물 수급안정**)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는 배추와 돼지고기 · 닭고기 등의 수급안정 노력 강화
 - **봄배추** 산지 현장점검, 수입할당물량 적기도입 등을 통한 **가격안정** 노력 적극 추진
 - **BSE 우려로 인한 축산물**(돼지고기 · 닭고기 등) **가격 및 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공식품 가격안정) 인상동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폭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공공요금) 상반기 중 공공요금 안정 기조 유지, 하반기에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
 - 월별 물가상황에 따라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기획 정보

국내·외 종자산업 현황과 시사점

□ 세계의 종자산업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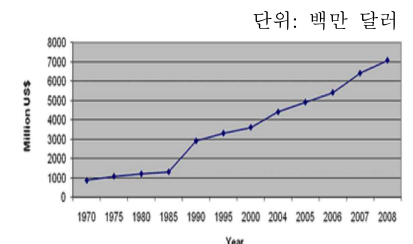
-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확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를 위해 총성 없는 ‘종자전쟁’이 본격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은 **향후 20년 이내 식량전쟁 더욱 가속화** 전망
- ‘씨앗’은 미래 농업의 기반이자 차세대 성장산업의 핵심이며, 특히 **국제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품종보호제도가 2012년 전면 시행**되면서 **로열티 지급의무 품종이 증가해 ‘종자’ 확보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 식물 종묘의 개발에 관한 권리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 사용료를 독점(우리 식탁에서 주로 접하는 식품들의 종자 로열티를 해당 국가와 기업에 지급)
- **세계 종자시장은 몬산토, 신젠타, 파이오니어 등 10대 다국적 기업이 67%(96년 14%에 불과)를 점유해 시장지배력 강화, 종자산업 주요국도 고품질 종자를 생산해 수출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집중

□ 국내의 종자시장 현황

1) 세계 종자시장 현황

- **세계 종자시장은 ‘72년 120억 달러 → ‘08년 약 695억 달러 (약 80조 원) → ‘20년 약 1,650억 달러 전망**
- **세계의 종자 교역량은 ‘90년 30억 달러 내외 → ‘00년 35억 달러 → ‘08년 71억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

< 세계 종자 교역량 추이 >



자료: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 매출액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몬산토, 노바티스, 리마그레인, 세미니스 등 5개사들이 상위 랭킹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종자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횡포 가능성 우려
- 주요 선진국은 종자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집중

2) 우리나라 종자시장 현황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08년 기준 약 695억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종자시장의 약 1.5%에 불과(10.5억 달러 정도)

< 분야별 세계 종자 시장 규모(2008년 기준) >

단위: 억 달러

구 분	계	농 산	축산(종축)	수 산	산 립
세계시장 규모(A)	695	367	171	157	-
한국시장 규모(B)	10.5	4	4.76	1.58	0.18
B/A	1.5%	1.1%	2.8%	1.0%	1.0%

자료: 신종수,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 농촌진흥청, 2010

- '97년 외환위기로 국내 종자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흥농종묘, 청원종묘, 서울종묘, 중앙종묘 등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 합병(M&A) 되면서 토종종자와 육종기술의 이전, 로열티 지급 증가와 종자구입비가 부담으로 작용
- 외국종자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로열티 대응을 위한 방어 전략에 머물고 있어, 세계시장에 대한 공격적 전략은 부족한 실정
- 아울러 국내 종자기업들의 신규 전문 육종인력 채용이 미흡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전문인력을 축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배추·고추·무 등의 품종 육종기술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품목인 양파·토마토·양배추·파프리카 등의 육종기술과 유전자원은 부족함.

□ 우리나라 종자산업 정책 동향

- 농식품부는 2011.12.7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2020년 종자수출 2억 달러(현 0.3억 달러), 2030년 30억 달러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 안정적인 식량생산 구축을 목표로 「종자산업 육성 방안」 발표
 - 종자산업을 농업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종자육종 연구기반 조성, R&D투자 확대 및 글로벌 종자기업육성지원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 추진
 - 정부는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의미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는 종자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R&D사업의 하나임.
 - 올해부터 10년간('12~'21) 총 예산 8,140억 원(정부 6,540억 원+민간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출 전략 품종 20개 이상 개발을 목표
 - ※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 예) 토마토 종자 1g 126,000~240,000원으로 금값의 평균 2배/컬러 파프리카 종자 1g(250립) 92,000원으로 2011.4월 기준 금값의 1.6배)
 -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 주권 전쟁*에 대비해 국내외 농업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규범인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확보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 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사용 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자원 제공국과 공유
- ## □ 시사점
-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의 개발은 고도의 집약된 기술이 필요하며, 우수 종자를 개발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이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사업 강화 필요

-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연평균 5.2%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수 종자의 개발과 자체기술력의 확보는 큰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의 불안정은 식량자원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특허전쟁 속에서 '종자전쟁'을 초래함. 농업경쟁력을 식량전쟁 대처 차원에서 강화하고, 종자 국산화도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필요
- 해외의존도가 높은 과수 및 화훼 종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종자 등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외국품종과 차별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관·학·연 역량 결집 및 지속적인 개발 노력 필요

※ 참고문헌

- 농림수산물식품부_www.mifaff.go.kr
- 농촌진흥청_www.rda.go.kr
- 공감코리아_www.chuksannews.co.kr
- 국립종자원_www.seed.go.kr
- 한국종자협회_www.kosaseed.or.kr
- 농림수산물식품부_보도자료(2011.12.6) "종자산업 육성 방안"
- 농촌진흥청_RDA Interrogang 57호 2012.3.14 「토마토의 건강한 매력」
- 농촌진흥청_RDA Interrogang 51호 2012.2.1 「농업생명공학 이야기」
- 농촌진흥청_농촌진흥일보(2012.2.20)
- 농촌진흥청_농촌진흥일보(2011.7.11)
- 국립종자원_뉴스레터 59호(2011.12.13)
- 국립종자원_종자소식 2011-5호(2011.10) 「우리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
- 한국개발연구원_나라경제 2012 March "종자산업 육성방안"
- 농민신문_보도자료(2012.3.12)
- 농민신문_보도자료(2011.11.18)
- 동아일보_보도자료(2011.10.17)
- 매일신문_보도자료(2011.10.7)
- 세계일보_보도자료(2011.9.6)
- 농수축산신문_보도자료(1999.10.6)

농정 여론 동향_1

KRE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기계가격 비싸고, 농기계은행 운영 효율성 떨어져 개선 필요

- 농약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면 가격 들쭉날쭉...소비자가격 표시제 시행해야
- 농기계와 농약값 너무 비싸...용자 이율 낮추고 저렴한 농약 개발을
- 각종 농자재 공정거래 여부 실사 통해 부풀려진 가격 바로 잡아야
- 대형농기계 임차 활성화 필요...농기계은행제도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

○ 농약 소비자가격 표시제 시행해야

- 농약에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각 지역 농협에서 판매되는 농약과 지역 농약상에서 판매되는 농약이 동일한 제품인데도 판매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큼. 이에 농약병이나 포장지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해 주기 바람.<김정오, 경남 거창>
- 농약의 가지 수도 너무 많고 부르는 게 값이라 농협을 통한 구입보다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면 1/3 정도가 비싼 실정임. 농약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함.<주양호, 전남 장흥>

○ 농기계와 농약값 너무 비싸...용자 이율 낮추고 저렴한 농약 개발을

- 농촌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의 활용도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인데 농기계 값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가가 많음. 농기계 구입 시 용자를 많이 하는데 농기계 용자 이율을 현행 3%에서 1%로 낮춰준다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됨.<박종임, 충북 괴산>
-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에 대해 용자가 아닌 보조금을 늘려 부담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길 바람.<김상우, 제주 서귀포>
- 농약값도 마찬가지로 신농약이라고 하여 이름만 바뀌면 가격이 배로 뛰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많음.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안전한 작물보호제를 하루빨리 개발해 줬으면 함.<박종임, 충북 괴산>

○ 각종 농자재 공정거래 실사 통해 부풀려진 가격 바로 잡아야

- 각종 농자재에 대한 공정거래 실천유무의 실사가 필요함. 특히 농기계 값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나친 마진율과 잘 지켜지지 않는 리콜서비스까지 사례를 수집하여 가격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할 것임.<김은규, 전남 강진>
- 농자재의 제작, 공급, 판매, 유통 등 단계별로 철저한 점검과 원가 계산을 통해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관리해야 함. 또 정부에서는 농자재 구입 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제조사, 제작사에 지원하여 출고가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임충빈, 경기 안성>
- 농기계의 가격이 자동차나 기타 공업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다는 것이 농민들의 공통된 의견임. 가격산정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검토가 있길 바람. 농기자재 생산업체의 사업수명이 짧아서 농기자재 구입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속품 구입이 어려워 수명이 남아있는 기자재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음.<김인남, 경북 상주>

○ 대형농기계 임차제도 활성화 필요...농기계은행 제도개선

- 농업 경영에서 지출의 60~70%를 차지하는 농자재 가격은 농촌경제를 좌우하고 있음. 해마다 치솟는 소모성 농자재와 농기계는 농업경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음. 더욱이 농기계 보조금의 유혹에 빠져 농기계를 구입하다보니 소득보다 농기계값 융자금 상환액이 더 커 농민들의 채무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 농기계는 농기계 회사나 영농법인에서 임차해 사용한다면 농자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 것임.<장석우, 충남 청양>
-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을 활용하는 농업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만 문제점도 갖고 있음. 지역마다 같은 작목을 경작하는 특성으로 같은 농기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정부에서 예산을 쏟아 부어 마련한 농기계은행제도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김갑순, 경북 영양>

○ 한국 중요 외국사에 비해 가격경쟁력 떨어져

- 모든 종묘는 외국회사로 넘어가고 한국 종묘는 한두 회사가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어 씨앗도 이름만 바꾸면 20~30% 인상됨. 친환경을 권장하지만 친환경 농약가격은 비싸고 자주 살포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음. 정부가 우리종자 보호와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김용덕, 경기 남양주>

○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친환경제조제가 비싸긴 하지만 인건비에 비해 쌀 편이고 발매기에 수월하다고 판단해(12,000원짜리 한병으로 30~40평 제초) 올해부터는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하기로 했음. 친환경 제초제 사용을 독려하고 지원하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됨.<박향숙, 전남 완도>
- 외국은 제초제를 사용하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제초제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을 잡아도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문제가 있는 것도 점검이 필요함.<박종임, 충북 괴산>
-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고 등록된 농자재들이 정부 보조 명부에 들어 가면 그 값이 크게 뛰어 비싼 댓가를 치르고 사용해야 마땅한 효과를 얻게 됨. 이에 농진청에서 이러한 제품을 수거해 실험하고 결과를 센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알려준다면 제품선택에 도움이 될 것임.<김갑순, 경북 영양>
- 농산물 영양제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생장조절제(호르몬)'를 첨가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성분과 함량을 표기한 제품은 극히 드문 실정임. 호르몬은 인체에 매우 영향이 큰 물질이 많은데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지도단속이 필요함.<김인남, 경북 상주>

○ 식물성버섯재배지원료 폐기물 분류하는 것은 부담

- 법률에 버섯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받을 시에 버섯농가들은 폐기물을 활용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꼴이 되고 소비자들은 폐기물로 키운 버섯을 먹는 것으로 오해해 신선버섯에 대한 소비위축이 우려됨.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는 되고 버섯은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정의도 맞지

않다고 생각됨. 이에 국내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료관리법에 의해 사료로 관리되는 것처럼 버섯원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할 것을 요망함.
<임광혁, 경기 광주>

□ 기타

○ 논 보상 염두하고 관상수 심어...진흥지역은 못하도록 해야

- 양산지역은 논 의 지주가 보상관계로 유실수 및 관상수 묘목을 심어 산패지나 산짐승의 서식처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진흥지역 논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정부 조치가 필요할 것임.<정순탁, 경남 양산>

○ 공공근로로 일손 빼앗겨 농촌인력난 심화...제도적 개선 필요

- 정부의 공공근로 제도로 지역주민 일손을 공공근로가 흡수해 지역농업 경영인들이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 저소득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되 지역과 이웃의 농업경영인의 고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함.<이택영, 전북 진안>

○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고령인 부상 우려...전담인력 지원을

- 구제역 예방접종이 농가의 책임이 되면서 60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직접 소에 백신을 접종하다 다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음. 이에 농가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직접 접종 작업을 하기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임.<김갑순, 경북 영양>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30일~5월 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미국 광우병 불동...안우도 덜 먹는다

- 미국 광우병 발병 이후, 5.1일 이마트, 4.26~29일 4일간 한우 매출이 일주일 전인 19~22일에 비해 11% 감소해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한우도 매출 감소. 대형마트 22일 강제휴업을 감안하면,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크다는 분석. 같은 기간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69%↓한 반면, 돼지고기 매출은 15%↑. 농식품부가 발표한 쇠고기 소비동향에서도



전국 1,065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의 쇠고기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국내산 쇠고기 판매 7%↓, 미국산 52%↓. 이는 4.24~29일의 판매치와 광우병 파문이 일기 전인 4.17~22일의 실적 비교. 농식품부, 한우 소비 감소 막기 위해 6만3,000마리 분량의 한우 할인 판매 및 군납용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전환할 계획

자료: 중앙일보(2012.5.2).

□ 비축 농산물 대거 풀린다

- 정부,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비축농산물의 시중 공급을 확대해 물가 안정 유도하고자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비축 농수산물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인 낮은 값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통해 공급. 이에 따라 5.15일까지 대형유통업체에 국산 봄배추를 시중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한 포기당 2,500원 이하 판매 조건으로 24만 포기를 한 포기당 2,300원에 공급. 고춧가루 80t과

마늘 220t도 오는 7월까지 대형유통업체에 저가로 공급하되 고춧가루의 공급가격은 1kg 기준 국산 2만8,500원, 외국산 8,400원으로 시중가격의 50%선. 판매조건은 1kg 기준 국산 3만5,000원, 외국산 1만2,000원. 마늘은 상품(깐마늘 1kg) 기준 6,600원 이하 판매를 조건으로 시중가격에 견줘 30% 정도 쉼 5,200원씩에 공급

자료: 농민신문(2012.5.2).

□ 국제 곡물가격 당분간 안정세 전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제 곡물가격...당분간 안정세(보합세) 유지·대두...수급 불안 전망. 올해 국제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6% 증가했으나 기말 재고율은 전년대비 0.2%p 낮은 20.3%로 수급 불안정 요인 잠재. 하지만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증가 및 흑해연안 국가 밀 생산 증가 등 생산전망 양호한 반면, 대두는 남미 가뭄 및 미국의 재배면적 감소 전망 등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해 수급 여건 불안정.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하는 등 국제 곡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5.3).

□ “일당 올라도 사람 없다” 농가시름

-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일손부족 현상 심화되어 해마다 임금은 오르지만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 특히 올해는 농촌 노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적기 영농에 큰 어려움 예상.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가 83.3%, 상시고용은 11%인데 반해 일일고용을 이용하는 농가는 63% 차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중앙회 차원의 인력센터 설치 필요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5.2).

□ 농어업용 시설 전기료 ‘연실와’

- 정부,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농어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5개 시설)에 대해 4.26일을 시점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 연간 최대 250억 원 전기요금 절감기대. 다만 FT A보완대책과 관련 있는 주시설에만 농사용이 적용, 회의실·식당 등 부대시설은 농사용에서 제외. 한편 이번 보완대책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주시설이 부대시설과 내선분리 돼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2012.4.1일로 소급해 농사용 요금 적용. 5. 31일까지 한전에 신청, 주시설과 부대시설이 분리 되지 않은 경우는 내선 분리신청을 별도로 해야 적용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5.4).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4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중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가 소득

-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014.8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
 - 농가소득의 감소는 소 가격 하락과 사료비 증가에 주로 기인
- (농업소득) 2011년도 농가의 농업소득은 875.3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 감소
 - 농업총수입(축산수입) 감소와 농업경영비(사료비) 증가에 주로 기인
- (농업외 소득) 2011년도 농가의 농업외 소득은 1,294.9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겸업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사업외소득 감소 기인
-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011년도 농가의 이전소득은 545.3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감소
 - 사적보조금 감소에 주로 기인
- 2011년도 농가의 비경상소득은 299.3만 원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

< 연도별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



□ 가계지출

-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가계지출은 2,790.6만 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 식료품 소비지출 증가에 주로 기인

□ 자산

- 2011년 말 기준 농가 소유 자산은 3억 8,718.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 예금 등의 금융자산과 토지 자산액 증가에 주로 기인

□ 부채

- 2011년 말 기준 농가 보유 부채는 2,603.5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
 - 기타용 부채만 증가하고,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부채는 감소

□ 부분별 지표

- (전·겸업별) 농가의 농업종사일수와 농업수입을 기준으로 농가를 전·겸업으로 분류하면, 겸업농가가 전업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많음.
- (주·부업별) 경지규모와 농업총수입을 기준으로 농가를 주업과 부업 등으로 분류하면, 전문농가와 부업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많음.
- (영농형태별) 농가의 주요 작물을 기준으로 농가를 분류하면, 축산농가가 평균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많음.
- (경지규모별) 경지규모별로 농가를 구분하면 경지규모에 따라 가계지출 간의 차이는 적지만, 경지면적을 7ha 이상 보유한 농가들은 7ha 미만 보유 농가에 비해 농가소득이 약 2배 정도 많음.
- (경영주 연령별) 농가를 분류하면 경영주 연령이 40~69세인 농가의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 모두 평균농가에 비해 많음.
- (지역별) 농가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농가를 분류하면, 농가소득은 제주도가 가장 높고, 가계지출, 자산, 부채는 경기도가 가장 많음.

< 용어 정의 >

□ 농가 관련 용어

- 전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1종 겸업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적은 농가
- 전문농가: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 농가 소득 및 가계지출 관련 용어

- 농업 소득 = 농업 총수입 - 농업 경영비
 - 농업 총수입: 농가가 당해 연도의 농업 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
 - 농업 경영비: 농업 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단, 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 생산물은 농업 경영비에서 제외)
- 농업외 소득 = 겸업 소득 + 사업외 소득
 - 겸업 소득: 농가가 농업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 소득: 농가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근로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금, 이자, 유가증권매매차익 등의 자본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이전소득: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경상적인 것으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비경상소득: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비지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비소비지출: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공적부담금과 가구의 생계와 관련 없는 경조비, 가구간이전지출 등의 지출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